

인터뷰

“가습기 살균제 사태, 옥시 불매운동에 그치지 말아야”

‘가습기 살균제 사태’ 바라보는 임신에 교수

정혜빈 기자 hb0204@khu.ac.kr

#. 가습기 분무액을 살균하기 위해 사용 해 온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많은 영유아, 임산부, 노인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을 앓게 됐다. 1994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가습기 살균제는 지난 15년 동안 수많은 ‘원인미상’의 폐질환 환자를 발생시켜 오다 2011년 정부의 명령으로 판매가 중단됐다. 정부가 2011년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원인미상의 폐질환이 발생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구조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동안 환경보건시민단체와 환경보건학회 회원의 자비와 자원봉사로 2012년 국내 최초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실태조사가 이뤄졌다. 학자의 양심으로 피해자의 편에 선 이들 가운데 경희의료원 임신에(직업환경의학) 교수가 있었다. 임 교수를 만나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건조한 바람이 부는 계절을 앞두고 아이 곁에 가습기를 틀어 둔 엄마는 가습기 물통에 낀 물때를 걱정했다. TV에서도 가습기의 물통에 세균이 번식할 수 있다며 가습기 위생에 신경 쓰라는 방송을 했다. 그 때 엄마는 가습기 살균제 뚜껑 한 개 분량을 가습기 물통에 넣으면 간편하게 항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광고를 보았다. 엄마는 그 가습기 살균제를 사기 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은 안전한 제품인지 꼼꼼히 확인한 후 장바구니에 담았다. 소중한 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랐던 엄마의 마음은, 하지만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회사와 그것의 판매를 허락한 정부로 인해 한순간에 비극으로 바뀌었다.

현재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의 수만 해도 1,528명이다. 그 중 15.6%에 달하는 239명은, 가족의 품을 영영 떠나버리고 말았다.

1994년에 국내에서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되기 시작한 이래로, 이것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들은 가습기를 필요로 하던 영유아, 임산부, 노약자, 환자가 있는 가정이라는 것이 임신에 교수의 지적이다.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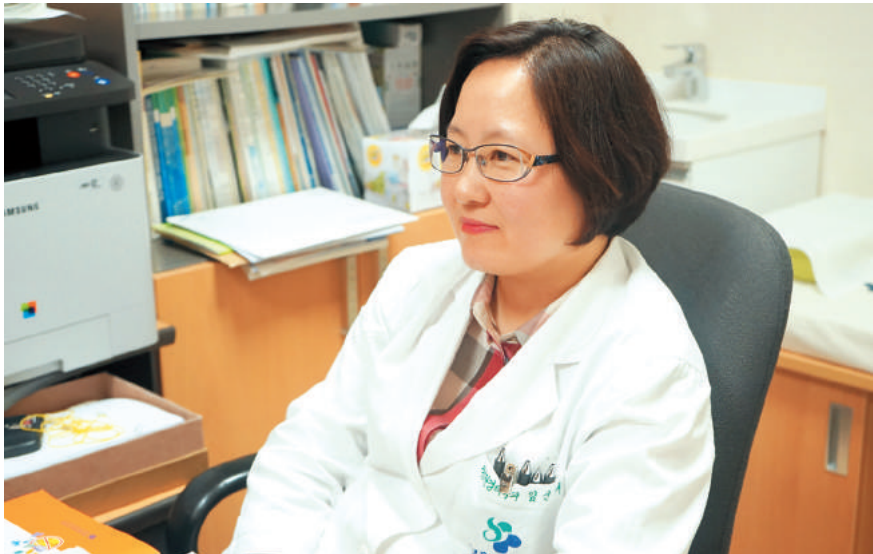
교수는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는 판매량 속에, 2000년 넘어서부터 심각한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며 규모가 큰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말한다. 그런데 초기에는 이 ‘심각한 호흡기 증상’이 가습기 살균제와 연관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알지 못했다.

15년 전부터 원인미상 폐질환 발생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 확실”

“피해사례가 속출하자 대학병원 소아과에서는 ‘봄만 되면 폐가 망가진 환자들이 이상하게 많이 오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사망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2006년에는 대한소아학과학회지에 ‘원인미상 소아급성 간질성폐렴 사망사례 발생’에 대한 논문이 실리기도 했다.

그러던 2011년 4월,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실에 급성호흡부전을 호소하는 중증폐렴 임산부 환자의 입원이 증가했다. 입원한 8명의 임산부 중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폐이식 수술을 받았다. 연합뉴스 등 외부언



론에서는 원인미상의 폐질환으로 인한 ‘산모연쇄사망’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다. 병원 측은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에 대한 감염을 조사했으나 원인을 알 수 없었다. 폐질환 환자를 치료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전혀 차도가 보이지 않자, 병원 측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에 이 상황을 신고하고 원인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요청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그 해 8월, ‘원인미상의 폐손상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역학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에 동물실험을 의뢰했다. 쥐를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진행한 결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쥐들이 죽어가고 죽은 쥐에서 피해자의 가장 큰 특징인 폐 섬유화가 발견됐다.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이 동물실험에서도 확인이 되자 2011년 11월 보건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전량수거명령을 내렸다. 이후 피해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며 원인미상의 폐질환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었음이 명확해졌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대책은 제조사에 소송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신규 화학물질은 쏟아지지만

검증할 제도적 장치는 부족

피해자 접수조차 받지 않았던 정부를 대신해서, 2012년 경 환경보건시민단체와 환경보건학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국내 최초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실태조사였다. 임 교수는 바로 이 실태조사에 참여하며 피해자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이 접수를 하면 조사자들이 전국에 흩어진 피해자의 집으로 방문했어요. 총 70여 가구 정도를 찾아가서 가습기 살균제의 사용기간과 사용방법, 가습기의 위치 등 통일된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했죠.”

이렇게 진행된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보건학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노출실태와 건강영향조사)라는 보고서를 작성, 발표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과 환경보건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던 와중에 학계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논의가 이처럼 활발히 이뤄지자, 정부에서도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만은 없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1차 피해조사를 시작해서, 현재 4차 피해조사에 대한 접수를 진행 중이다. 이 피해조사에는 이전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를 접해 본 적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했는데, 임 교수는 1차 피해조사에 참여해 피해자와 가족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증상을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치료를 돕는 등 피해자 정신건강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했다.

“집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어머니가, 또는 임신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가습기

살균제를 직접 사온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피해가 발생한 이후 이들은 큰 죄책감에 빠져있죠.”

최근 들어 다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부각되고 있는 이 가습기 살균제 파동의 한 복판에서 초창기부터 활동한 임 교수. 그에게 “우리는 이 사건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 전문가적 조언을 구해봤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최근 대표적인 가습기 살균제 제조기업인 옥시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단지 해당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서 그치지 말아야 해요. 좀 더 본질적으로, ‘합성된 화학물질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유해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은 효과가 뛰어난 살균제품을 만들기 위해 독성이 강한 합성 화학물질을 사용한다. 임 교수는 “상용 제품의 경우 의약품과 달리 사용자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 사용 방법도 다양하다”며 “그만큼 합성 화학물질로 이뤄진 상용 제품의 안정성은 확인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은 물론, 사용자의 입장에서 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여타 환경성 피해사례와 달리 오히려 위생개념이 철저했던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위생을 관리하기 위해서 화학물질을 사용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청소하는 입장의 사람은 힘 안들이고 깨끗하게 닦이는 제품을 선호하는데, 이 제품들은 세균이나 곰팡이 등을 쉽게 제거하는 만큼 독성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합니다.”

임 교수는 “국내에서만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피해자가 발생한 이유는 안전하지 않은 사용방법에도 큰 원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살균제는 가습기 물통을 세척할 때에만 잠시 사용하고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 안전인데, 기업 측이 잘못된 사용법을 제시하여 피해가 심각해졌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화학물질의 유해성은 사용방법에 따라 매우 달라지므로, 제품 별로 안전한 사용방법을 숙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임 교수의 조언이다.

매년 수십만 개의 신규 화학물질이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신규 화학물질로 제조한 제품의 안정성을 검증할 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상태이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건강 관련 이슈가 문제가 되었던 반면, 최근에는 주로 일반인의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건강 관련 이슈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임 교수는 “사용자가 시제품으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판단이 들면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우선 치료를 받은 후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 시기에 사용자의 신고가 모이게 되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서 “회사에 연락하거나 전문기관에 신고를 하는 절차를 거쳐 사용자가 유해 화학물질을 배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1 5대 연계협력 클러스터   2 KHU Global Engagement   3 후마니타스칼리지 2.0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대학이 먼저  
달라지겠습니다

경희대학교가 교육·연구·실천을 창조적으로 결합하는  
'5대 연계협력 클러스터'와 함께 '더 나은 문명'을 추구합니다

인간 대신 기계가 생각하는 시대, 인간의 인간다움을 재정의해야 하는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깊이 성찰해야 하는 문명-경희대가 '5대 연계협력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대학의 새로운 가치와 지향점을 추구합니다.  
문명사적 대전환을 예의주시하면서 50년, 100년 후 인간과 지구에 도전합니다.

바이오헬스

동서 의료·보건의 미래

미래 과학

인간 친화적 성장동력

인류 문명

전환설계를 통한 지속가능 문명

문화 예술

인간의 무한한 정신세계 고양

사회 체육

몸과 문명의 조화와 균형

바이오헬스

'동서 의료·보건의 미래'를 선도하는 연계협력 (천연물신약, 바이오헬스, 실버)

미래과학

'인간 친화적 성장 동력'을 추구하는 연계협력 (창정에너지, 생태·환경, 융합공학)

인류문명

'전환설계를 통한 지속가능 문명'을 구현하는 연계협력 (미래학, 문명론, 인지과학)

문화예술

'인간의 무한한 정신세계를 고양하는 연계협력 (도시전환, 예술과 새로운 삶, 미래미디어)

사회체육

'몸과 문명의 조화로운 결합을 증대하는 연계협력 (인문체육, 스포츠문화학, 몸철학과 웰빙)

경희대 서울캠퍼스 본관 상단 부조를 다듬은 것입니다. 1956년 완공된 본관 부조는 경희의 창학이념 '문화세계의 창조'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2016 / 2017 석학초빙 분야 : 우주론, 미래학, 문명사, 과학철학, 인지과학, 평화학, 종교학, 미학, 예술사 분야 00명  
문의 : 서울캠퍼스 교무과 02)961-0051   국제캠퍼스 교무과 031)201-3031   임용정보 : bang.khu.ac.kr/hjis2/